

KIEP 한중경제 포럼

KIEP Korea-China Economic Forum

제03-06 / 2003년 6월 26일

사스(SARS)의 경제적 영향과 중국경제 중장기 전망

판 강(樊綱)

중국국민경제연구소장 겸 북경대학교 교수

I. 발표요지

1. 사스가 중국 거시경제에 미친 영향

□ 수요를 억제하고 소비 및 투자를 포함한 각종 경제활동을 위축시킴.

- 특히, 사스로 인해 여행, 쇼핑, 외식, 회의, 투자프로젝트 상담은 물론이고 외출 자체를 꺼리는 등 전반적인 사회 및 경제활동 축소를 가져옴.
- o 5월 소비는 4.3% 성장에 그쳤는데, 이는 1980년대 말 이후 가장 낮은 성장률임.
- o 여행업 -30~-40%, 요식업 -15.5%, 철도·도로·항공 -41.5% 등 대부분의 서비스산업이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함.

* KIEP 북경사무소에서는 중국경제 현안과 주요 경제정책 방향을 심층 파악하고, 정책 입안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하는 중국 관리 및 학자들과의 교류를 확대하기 위해 <한중경제포럼>을 운영, 매월 정기 세미나와 수시 간담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중국측에서는 유관부처의 고위관리 및 전문가가 주제발표자로 참석하며, 한국측에서는 주중 한국대사관 경제부문 인사, 한국경제단체 및 기업 대표들이 토론자로 참석하고 있습니다.

- 사스와 같은 전염성 재앙의 경우, 직접적 피해자는 소수 환자에 국한되지만, 효과적인 통제가 안될 경우 사회구성원 전체의 행동에 영향을 미침.
- o 예컨대, 한 사람의 경영자 또는 투자자가 회의나 상담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제품 주문 또는 투자프로젝트 진행에 연쇄적인 파급효과가 미침.

□ 투자 및 무역 부문에 미친 영향

- 투자 부문에의 영향
 - o 금년 5월의 투자증가율은 34.5%로 4월보다도 오히려 큰 폭으로 증가했으며, 1~5월의 투자증가율도 1/4분기보다 소폭 상승한 31.7%를 기록함.
 - o 사스 영향에도 불구하고 투자증가율이 하락하지 않은 것은 既계획된 투자프로젝트가 실행되었고, 5월 들어서는 일부 지역에서 소비감소로 인한 성장률 저하를 막기 위해 재정지출을 늘렸기 때문임.
 - o 북경의 경우, 민공들의 귀향과 화물 진입 통제 등에 따른 영향이 있었으나 5월말 이후 정상화되기 시작, 오히려 투자가 증가세를 보임.
- 무역 부문에의 영향
 - o 금년 5월 수출과 수입증가율이 각각 37.3%와 40.9%를 기록함으로써 1~5월의 무역흑자가 23.7억 달러에 달함.
 - o 현재까지 무역 부문에서는 사스로 인한 부정적 영향이 거의 나타나지 않고 있으나, 일정기간(6개월~1년)이 지난 후부터 이른바 “lagged effect”가 예상됨.
 - o 특히, 일부 인터넷과 전화를 통한 주문을 제외하고는 4월말부터 6월초까지 국내기업들은 신규 주문이나 계약 체결을 거의 성사시키지 못한 것으로 나타남.
 - o 기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는 응답한 기업의 60%가 신규 주문을 받지 못했으며, 주문이 감소한 기업은 30%에 달한 것으로 나타남.
 - o 북진성의 경우, 사스 환자가 매우 적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적인 측면에서의 부정적 영향은 다른 지역과 거의 동일함.

- 무역 및 투자부문에 대한 사스의 영향은 3/4분기 내지는 4/4분기에 가시화될 것인바, 중국정부는 하반기부터 심사비준 절차 간소화, 수출세환급률 인상 등 수출촉진 조치를 실시할 것임.

□ 경제성장률

- 5월의 GDP 성장률은 7.5%에 그쳤는바, 1/4분기의 9.9%, 4월의 9.2% 성장을 감안할 때 사스의 영향이 가시화되고 있음을 보여 줌.
- o 그러나, 1/4분기에 이례적으로 높은 성장을 시현했고, 재정지출 확대 등 정부조치에 힘입어 4/4분기에도 높은 성장세가 예상됨에 따라 금년 전체로 8% 성장은 무난할 것으로 전망됨.

□ 경기과열론 잠재운 사스

- 사스 발발 직전 중국경제는 지속적인 고성장과 큰 폭의 투자증가에 따른 경기과열 조짐이 나타남으로써 인플레이 방지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었음.
- o 5월의 소비자물가상승률 0.7%와 투자증가율 34.5%는 소비증가율 4.8%와 생산재가격상승률 3~4%를 감안해도 여전히 높은 수치임.
- o 특히 지난 2주 동안 강동성·강소성·북건성의 투자증가율은 과열 현상을 보였으며, 이에 따라 신용대출도 23~24% 증가하였음.
- 사스는 중국경제에 대한 부정적 영향에도 불구하고 이같은 경기과열을 자연스럽게 진정시키는 긍정적 효과를 가져옴.
- o 중국 거시경제는 단기적으로 사스로 인한 영향보다는 투자과열과 인플레이 억제 문제가 더욱 중요함.
- o 중국경제의 연간 적정 성장률은 8% 정도이며, 그 이상은 과열임.

□ 중국경제의 디플레와 인플레이 문제

- 1997년부터 가시화된 디플레이션의 주요 원인은 1996년 이후의 신용대출 위축에서 비롯되었는바, 이는 은행 부실채권을 줄이기 위해 중국정부가 대출억제 정책을 실시했기 때문임.
- o 따라서 중국의 디플레이션 현상은 아시아금융위기로 인한 외부적 요인 때문이 아니라 중국 내부적인 문제로부터 시작된 현상임.
- 중국의 디플레는 공급 측면의 요인이 큼.
- o 최근 3-4년간 기업개혁, 기술도입, 외자유치 등으로 기업효율이 제고되고 원가가 하락함으로써 제품가격의 하락에도 불구하고 기업이익이 상승하고 기업의 투자가 지속적으로 늘어남.
- 현재 소비자물가는 낮지만, 투자증가율의 급상승은 투자재가격의 상승을 초래, 잠재적인 인플레이 요인이 되고 있음.
- o 작년 하반기 석탄, 철강, 시멘트, 화공원료 등의 가격이 5-6% 상승
- o 인플레이가 일단 발생하면 경제의 악순환이 계속될 수밖에 없는바, 사전에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최선임.

2. 중국경제의 중장기 전망

□ 앞으로도 상당기간 중국경제는 고성장을 유지할 것임.

- 무엇보다도 지금까지 고성장을 유지시켜 온 요소들이 존속할 것이기 때문인바, 특히 FDI 유입은 향후 2~3년간 여전히 높은 증가세를 유지할 것임. 사스에도 불구하고 금년 1/4분기 FDI 증가율은 59.6%에 달함.
- 지방 국유기업 개혁이 가속화되어 향후 중국경제 성장의 동력으로 자리 잡게 될 것임.
- o 올해초 단행된 국유자산관리체제 개혁에서 省·市급 지방정부의 국유자산 소유권을 인정함으로써, 금후 지방 국유자산의 매각 및 재편을 통한 국유경제의 효율제고가 실현될 것임. 또한 그 과정에서 외국기업의 참여도 활

발해질 것임.

□ 실업 및 은행부실채권 문제의 장기적인 해결

- 중국경제가 개혁을 지속하면서 8% 정도의 성장을 유지할 경우, 실업 및 은행부실채권 문제는 큰 위협이 되지 않음.
- o 실업과 부실채권 문제는 단기간내 해결이 불가능한바, 특히 부실채권 문제는 GDP내 비중이 확대되지 않고 고성장이 지속되기만 하면 장기간에 걸쳐 해결될 수 있음.

□ 인민폐 환율 문제

- 최근 들어 미·일을 중심으로 국제사회의 인민폐 평가절상 압력이 커지고 있음.
- 중국내 학자들 간에도 평가절상을 검토해야 한다는 논의가 나오고 있음.
- o 통화가치가 지나치게 낮고 무역액과 외환보유고가 너무 많아도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임.
- 그러나 환율의 결정은 취업압력, 성장률 등을 감안하여 정치적으로 결단할 수밖에 없는 문제임.
- o 외환관리, 투자, 무역 부문에서는 모두 인민폐 환율의 안정이 필수적임.
- 또한, 인민폐 환율의 변동은 주변국가들의 환율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신중히 처리해야 함.
- o 현재 중국 무역액의 65%가 일본을 포함한 아시아국가들과의 무역임.

II. 토론 요지

□ 인민폐 평가 절상 문제

問 : - 인민폐 환율의 평가절상 압력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중국이 취할 수 있는 바람직한 환율정책 방향에 대해서 말해 달라. 또한 만약 평가절상이 이루어질 경우, 예상되는 절상폭은?

답 : - 현재 환율문제 해결을 위한 중국의 정책 대안으로는 대체로 세 가지 방식이 있음.

- 첫째, 美달러화에 페그시킨 현행 고정환율제도를 유지하면서 인민폐를 20% 정도 절상시키는 방법임.
- 둘째, 美달러화 뿐만 아니라 유로화, 엔화 등을 포함한 주요 통화의 국제금융시장에서의 가치 변동을 반영하여 환율을 결정하는 복수통화바스켓제도를 시행하는 방법임. 일부 학자들은 복수통화바스켓제도 도입을 통해 미달러에 대한 뚜렷한 절상효과 없이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본인은 이에 동의하지 않음.
- 셋째, 관리변동환율제도를 시행하여 변동폭을 확대하는 방안이 있으나, 현 상황에서는 이 또한 자칫 환투기를 조장하고 외환관리상 문제를 야기할 수 있음.
- 한편, 변동환율제도는 중국이 궁극적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이긴 하지만, 개도국인 중국의 입장에서 당장 시행하는 것은 곤란함.

- 개인적으로는 평가절상 압력이 지금처럼 커지기 이전부터 변동폭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음. 그러나, 지금은 이러한 방식을 취하기 어려운 상황인바, 현 시점에서 중국의 선택지는 두 가지 뿐임. 하나는 고정환율제도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일정기간 후 한꺼번에 조정을 단행하는 방안임. 다른 하나는 복수통화바스켓제도를 도입하여 美달러화와 엔화, 유로화, 마르크화 등 주요 통화의 국제금융시장 변동시세를 반영시켜 환율을 결정하는 방안임. 어떠한 방안을 선택해도 중국경제에 대한

충격은 불가피하지만, 가능한 한 조속히 결단을 내릴 필요가 있음.

□ 금년도 경제성장률

問 : - 판강 교수께서는 금년도 중국 경제성장률이 8%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그러나 예측기관에 따라 성장률이 7~8%로 상이한데, 이처럼 차이가 나는 것에 대한 견해는?

答 : - 국가통계국은 금년 경제성장률 예상치를 7%로 발표하고 있음. 정부기관 통계는 대체로 보수적일 수밖에 없음. 그러나, 전반적인 여건을 고려할 때, 금년 중국경제는 아무리 낮아도 7.5% 이상 성장할 것으로 예상됨. 이는 국가통계국이 지난 5월과 6월의 GDP 증가율을 각각 6.8%와 7%로 추산하고, 하반기, 특히 4/4분기에는 성장률이 크게 높아져 8.5%에 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 데 근거한 것임.

□ 중국정부의 사스 관련 재정지출 규모

問 : - 사스로 인한 중국정부의 추가 재정지출 규모는?

答 : - 공공위생시설 관련 지출을 포함하여 약 600억 元 규모로, 이는 기존의 예산항목과 각 부처에서 전용된 예산을 포함한 것임. 위생채권 발행 문제도 논의되었으나, 채택되지는 않았음.

□ 중국 통계의 신뢰도

問 : - 구매력(PPP : Purchasing Parity Pwer) 평가 기준 중국의 1인당 GDP 수준은?

答 : - 일부 연구에 따르면 PPP 지수가 2.5 정도로, 이를 대입하여 계산할경, 현재 중국의 1인당 GDP는 3,000 달러 수준에 달함.

問 : - 중국의 통계자료는 어느 정도 신뢰할 수 있는가?

答 : - 중국의 통계처리 과정은 매우 복잡함. 현재로서는 100% 신뢰할 만하다고 할 수도 없지만, 100% 불신할 필요도 없음. 현재 중국정부의 통계는 지방정부 보고를 근거로 하여 작성되는데, 지방정부가 일부 부문에서 축소 또는 확대 보고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특히 전체 GDP에 대한 기여도가 60% 정도에 이르는 연해지역은 축소신고 하는 경향이 많고, 상대적으로 낙후된 내륙지역은 확대신고 하는 경향이 있어, 전체적으로는 오차가 상당부분 상쇄되는 결과를 가져옴. 민영기업 또한 탈세 등의 이유로 매출액을 축소 신고하는 경우가 많음.

- 최근에는 토마스 로스키(Thomas Rawski)가 사용하는 방식대로 GDP 증가율과 재정 및 전력소비량 증가율을 반영하여 실질성장률을 산출하는 방식도 적용하고 있음. 최근 푸젠성 샤먼(廈門) 방문시, 샤먼시장이 GDP 성장률 14%, 재정증가율 27%, 전력소비량 증가율 23% 등 수치를 제시하면서 경제성장 추세를 설명하는 것을 들었음. 한편, 1998년도에 중국의 전력소비량이 하락하였음에도 불구하고 GDP 성장률은 상승하는 기현상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견해가 많았는데, 이는 전력소비량이 비교적 적은 경공업과 서비스산업의 증가에 따른 것으로 설명할 수 있음.

- 지방의 보고에 근거해서 작성되지 않는 통계수치, 즉 재정수지, 무역액, 외국인투자, 예금잔고 등의 통계는 상당히 정확한 편임.

□ 중국 위기론

問 : - 최근 들어 서방학자 및 언론들이 재정의 건전성, 금융기관 부실채권, 국유기업 개혁 부진 등을 근거로 중국 위기론을 자주 거론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생각은?

答 : - 중국 위기론은 개도국이면서 체제전환국인 중국경제의 특성을 반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바, 이는 성장과정에서 직면하는 지극히 정상적이고 동시에 불가피한 문제임. 이러한 문제점들은 지속적인 개혁과 성장을 통해 문제 해결을 위한 시간을 버는 것만이 최선임.

□ 실업률

問 : - 중국 정부의 실업률 목표치는?

答 : - 실업률에 대한 중국 정부의 명확한 목표치는 없으나, 도시실업률을 4% 이하 수준으로 유지하고자 하고 있음. 과거 국유기업 정리해고자가 연간 700만 명에 이르렀으나 현재는 500만 명 내외로 감소하였음. 농민은 토지를 소유하고 있어, 농촌잉여노동력이 정치적으로 큰 부담을 주는 것은 아님. 반면, 도시지역의 국유기업 정리해고자 문제는 정치적으로 매우 민감한 사안임.

□ FTA 문제

問 : - 최근 동아시아지역에서 FTA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중국도 과거와 달리 이 문제에 대해 상당히 적극적인 자세로 돌아선 것으로 알고 있음. 특히 한·중·일 FTA 형성 문제가 관심사로 대두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答 : - 주룽지(朱鎔基) 전 총리가 ASEAN과의 FTA 추진을 제안하면서 한·중·일 FTA 가능성 연구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언급한 바 있음. 중국-ASEAN 간 FTA는 상대적으로 용이하나 한·중·일 3국간 FTA는 그 당위성에도 불구하고 현재로서는 실현가능성이 희박함. 많은 사람들이 농업문제를 이유로 내세우고 있으나, 그보다는 3국간 경제 격차가 너무 크다는 것이 보다 중요한 장애요인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는 지속적인 검토가 필요함.(***).